World Economy Today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0년 1월 31일 Vol. 20 No. 2

ISSN 1976-0515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장(dhjoe@kiep.go.kr, Tel: 044-414-1123)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hjyoon@kiep.go.kr, Tel: 044-414-1064)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브렉시트 경과
2. 브렉시트 협정의 주요 내용
3. 브렉시트 개시의 의미와 향후 쟁점

주요 내용

▶ 영국 및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예정

-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EU 탈퇴가 51.9%를 득표한 이래 총리 2회 교체(카메론 → 메이 → 존슨), 조기총선 2회 실시, 브렉시트 시한 3회 연기(2019년 3월 → 4월 → 10월 → 2020년 1월) 등 혼란이 지속되었음.
- 존슨 총리가 기존 탈퇴협정의 문제 조항을 수정하고, 조기총선 승리로 하원 지배력을 강화하여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실시 및 이행기(transition period) 돌입'을 확정
- 이행기(~2020. 12. 31) 동안 EU와 영국은 이행기 이후의 양자관계에 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

▶ 존슨 총리의 탈퇴협정은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 일부 쟁점만을 수정

- 이행기 종료 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관은 실시하지 않고, 단일시장 관련 EU 법령 일부는 이행기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에 일정 기간 적용됨.
- 또한 존슨 총리는 이행기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영국 국내법도 마련

▶ 합의에 따른 브렉시트 및 이행기가 개시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됨.

-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 발생 가능성도 낮음.
- 이행기 종료와 함께 한·영 FTA(2019. 10. 28 국회 비준 완료)가 발효될 전망이며, 관련 연구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EU·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서는 이행기 연장 및 협정 수준, 제3국과의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일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협정이 우선 체결될 가능성이 거론됨.

- 존슨 총리의 강경 입장에 따라 이행기 연장 가능성이 낮아져서, 브렉시트 협상 초기의 예상이나 EU 측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우선협상 분야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
- 서비스 분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EU와 영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대(對)미국 자유무역협정 등도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1. 브렉시트 경과

표 1. 브렉시트 주요 사건

연도	주요 사건
2016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51.9%(반대 48.1%) 득표, 카메론 총리 사임 발표 7월: 메이 총리 취임
2017	1~2월: 영국정부 브렉시트 및 EU 탈퇴 백서 발표 3월: 영국정부 EU 탈퇴 의사 공식 통보, 탈퇴 시한은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6월: 조기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의석을 잃으며 과반 확보에 실패, 북아일랜드연합당(DUP)의 지지로 정권 유지
2018	11월: EU·영국 간 탈퇴협정 합의문 발표
2019	2~3월: 영국하원에서 탈퇴협정 부결 3월: 브렉시트 시한 4월로 조건부 연장(1차) 4월: 브렉시트 시한 10월 31일로 연장(2차) 5월: 메이 총리 사임 발표 7월: 존슨 총리 취임 8~9월: 존슨 총리가 영국하원 정회 결정 10월: EU·영국 간 탈퇴협정 수정안 발표, 영국하원이 탈퇴협정 표결 거부, 노딜 금지법 영국의회 통과, 브렉시트 기한 2020년 1월 31일로 연장(3차) 12월: 영국 조기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압승하며 단독과반 확보
2020	1월: 브렉시트 및 이행기 개시(~2020. 12. 31)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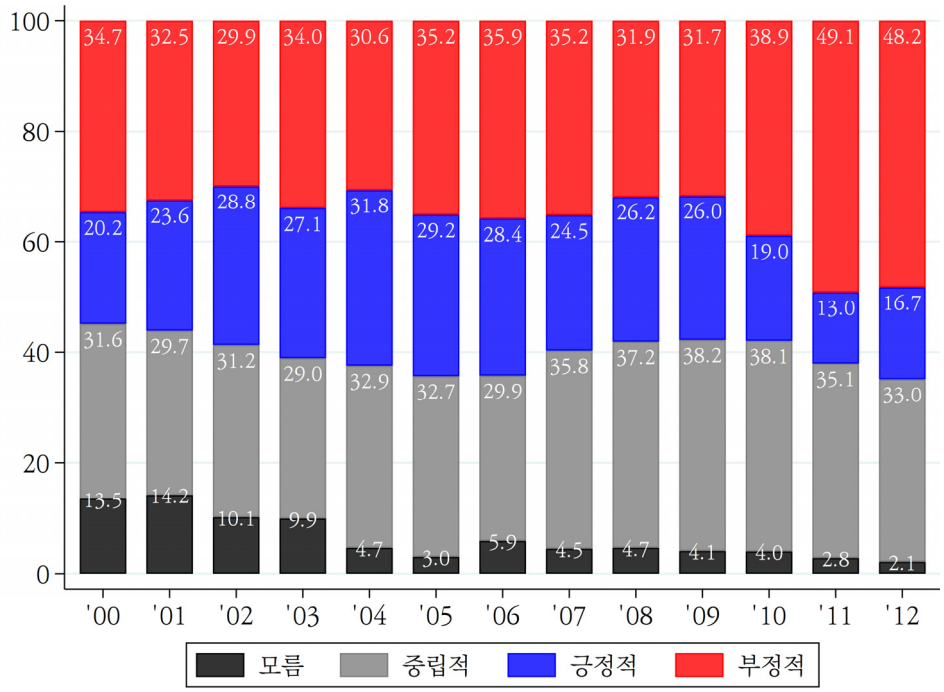
■ **[카메론의 도박] 유로 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영국 내 EU 회의주의가 확산되자 카메론(Cameron) 영국 전 총리는 대응책으로 2016년 6월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탈퇴가 51.9%(잔류 48.1%)를 득표하자 카메론 총리 사퇴**

- 유로 지역 재정위기,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에 따른 역내 이민 증가, 대규모 난민 유입 등으로 영국 내에서 EU에 대한 인식이 악화됨(그림 1 참고).
- 이러한 불만 속에 보수당 내 유럽회의주의세력(Eurosceptics),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 등에 대한 지지가 커지자 EU 찬성론자인 카메론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자신이 연임할 경우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임을 2013년 1월에 선언[1)]
  - ○ 카메론 총리는 EU에 대한 영국 내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정상들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그러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EU 잔류 측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단독과반인 331석(51%)을 확보하여 연임에 성공한 카메론 총리는 약속대로 영국 내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EU 정상들과 2016년 2월에 합의하였고,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같은 해 6월 2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2)]

1) Hunt(2013. 1. 23), "David Cameron speech: UK and the EU," *BBC News*.
2) 영국선관위 누리집, "Results and turnout at the 2015 UK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elections-and-referendums/past-elections-and-referendums/uk-general-elections/results-and-turnout-2015-uk-general-election; EU이사회 누리집, "European Council, 18-19/02/20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16/02/18-19; 영국의회 누리집, "Statement on the European Council: 22 February 2016,"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6/february/statement-on-european-council-22-february-2016(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30).

그림 1. 영국인들의 EU에 대한 인식 추이

(단위: 전체 응답자 중 % 비중)



자료: Eurobarometer Interactive DB(검색일: 2020. 1. 3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직전 총선보다 높은 72.2%의 투표율 아래 EU 탈퇴가 51.9%를 득표[3]
  - ○ 반면에 런던(잔류 득표율 59.9%), 스코틀랜드(62.0%), 북아일랜드(55.8%)에서는 EU 잔류 득표율이 과반을 크게 넘음.
  - ○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대체로 교육·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노년층·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對)중국 수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EU 탈퇴의 득표율이 높았다고 분석하고 있음.[4]
- 카메론 총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집권 보수당의 당권 경쟁에서 승리한 메이(May)가 총선 없이 2016년 7월에 총리에 취임[5]

■ [메이의 교착] 메이 총리가 2018년 11월 EU와 탈퇴협정에 합의하였으나 영국하원에서 동 협정이 연이어 부결되었고, 브렉시트 시한을 수차례 연기하였음에도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않자 메이 총리도 사퇴

3) 영국선관위 누리집, "Results and turnout at the EU referendum,"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elections-and-referendums/past-elections-and-referendums/eu-referendum/results-and-turnout-eu-referendum(검색일: 2020. 1. 30).

4) Arnorsson and Zoega(2018), "On the Causes of Brexi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5; Becker, Fetzer, and Novy(2017), "Who Voted for Brexit? A Comprehensive District-Level Analysis," *Economic Policy*, Vol. 32, Issue 92; Colantone and Stanig(2018), "Global Competition and Brexi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2, Issue 2.

5) 영국의회 누리집, "Outcome of the EU Referendum," 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2016-06-27/debates/1606275000001/OutcomeOfTheEUReferendum(검색일: 2020. 1. 30); *BBC News*(2016. 7. 13), "Theresa May: Word unionist 'very important to me'."

- 메이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를 받들어 2017년 3월 29일 영국의 탈퇴 의사를 EU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고, 회원국의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따라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이 브렉시트 시한이 됨.[6]

- 메이 총리는 대(對)EU 협상력과 하원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2017년 6월에 조기총선을 실시하였으나 집권 보수당의 하원 의석수가 오히려 감소하여 과반에 미달하였고, 북아일랜드 지역정당인 DUP(Democratic Unionist Party)의 지지에 의지하여 정권을 유지[7]

○ DUP는 북아일랜드와 그레이트브리튼의 통합을 중시함.

-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은 3차례 비준 시도가 모두 큰 표 차로 실패하였고(표 2 참고), 이에 따라 브렉시트 시한도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연기됨.

○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 중 최대 쟁점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인데, 영국과 EU는 물리적 국경 부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로 △이행기 내 EU·영국 간 별도의 합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와 관세동맹 수준의 통합을 맺고 △나아가 북아일랜드는 현행 EU 단일시장에 가까운 수준의 통합을 EU와 맺도록 합의하였음.[8]

○ 이에 대해, 영국하원 내 브렉시트 찬성파는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이 이루고자 했던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안전장치가 가로막을 것이라고 반대하였고, 보수당 집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DUP는 안전장치가 북아일랜드를 그레이트브리튼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라고 반대하였음.[9]

표 2. 메이 총리 탈퇴협정의 영국하원 비준 투표 결과

투표일	찬성	반대	찬-반 표차
2019. 1. 15	202	432	230
2019. 3. 12	242	391	149
2019. 3. 29	286	344	58

자료: 영국의회 누리집, "Hansard," https://hansard.parliament.uk(검색일: 2020. 1. 3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메이 총리가 사임하였으며,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Johnson) 전 외무장관이 메이 총리 취임 시와 마찬가지로 총선 없이 집권 보수당 내 당권 교체를 통해 2019년 7월 총리에 취임[10]

■ [존슨의 돌파] 존슨 총리는 대(對)EU 재협상을 통해 기존 탈퇴협정의 문제 조항을 수정하고 조기총선 승리로 하원 지배력을 강화하여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실시 및 이행기(~2020년 12월 31일) 돌입'을 확정

6) 조동희(2017), 「EU 회원국 내 정치적 포퓰리즘 확산 현황 및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06호, p. 7.
7) *BBC News*(2017. 6. 26), "Conservatives agree pact with DUP to support May government."
8) 구체적으로,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안전장치 발동 시 △영국 전체가 EU와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정부보조, 경쟁정책 등에서 EU의 규제를 따르며 △나아가 북아일랜드는 부가가치세, 농업, 환경 등에서도 EU의 규제를 따름. 영국하원 누리집, "The backstop explained,"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parliament-and-elections/parliament/the-backstop-explained (검색일: 2020. 1. 30).
9) 김흥종, 임유진(2019),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9-01호, pp. 7~8.
10) Politico(2019. 5. 24), "Theresa May steps down in emotional Downing Street speech"; *Time*(2019. 7. 23), "Boris Johnson Wins Contest to Become New U.K. Prime Minister."

-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며 EU와 재협상을 하여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수정한 탈퇴협정 도출

○ 수정안에 따르면 이행기 종료 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 규칙의 일부만 한시적으로 적용받음.

- 그러나 영국하원은 수정안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표결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총리로 하여금 EU에 브렉시트 시한 연장(~2020. 1. 31)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일명 노딜 방지법)을 통과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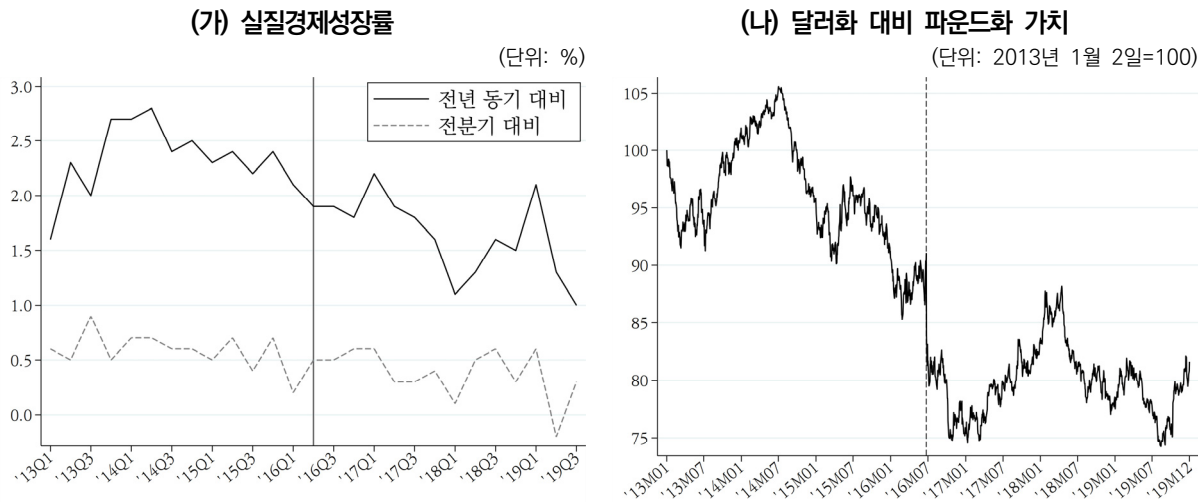
○ 이에 존슨 총리는 노딜 방지법에 동조한 보수당 의원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출당시키는 등 당내 지배력을 강화하였고, 조기총선을 통해 브렉시트 중심의 정계개편을 모색

- 2019년 12월 12일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하원 365석(전체 650석)을 차지하며 압승[11)]

- 브렉시트 이행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이 영국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영국시각 2020년 1월 31일 23시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이행기(transition period; ~2020. 12. 31)가 개시될 예정

■ 한편 브렉시트 국면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영국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그림 2.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후 영국 경제지표 추이



주: 수직선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점(2019. 6. 23) 표시.
자료: 영국통계청 DB 및 FRED DB(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2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영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 둔화를 보이며 2019년 2/4분기에는 전기대비 -0.2%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신규투자를 약 11%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짐.[12)]

○ 한편 기업들의 브렉시트 대비 과정에서 재고증감 폭이 증가한 것도 성장률 변동 폭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13)]

11) 조기총선에 대한 분석은 조동희, 윤형준(2019), 「영국 조기 총선 결과 및 브렉시트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9-40 참고.
12) Bloom *et al.*(2019), "The impact of Brexit on UK firms," Staff Working Paper No. 818, Bank of England.
13) 영국통계청 보도자료(2019. 11. 11),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uly to September 2019," https://www.ons.gov.uk/economy/gros

2. 브렉시트 협정의 주요 내용

표 3. 브렉시트 관련 조약 및 주요 법령

명칭	기능 및 특징
EU 탈퇴법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	- 브렉시트 이후에는 EU 법의 영국 내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EU 법 및 파생 법령을 영국의 국내법으로 바꿈. - 대EU 협상에서 영국정부의 역할을 규정
탈퇴협정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EU·영국 간 국제조약 - 영국의 EU 탈퇴 조건 전반을 규정 - 탈퇴 후 EU·영국 관계 협상에 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에 관한 의정서(Protocol)가 부속됨.
EU 탈퇴협정이행법 (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Act 2020)	- 탈퇴협정을 국내법화함. - 영국정부의 역할 관련 EU 탈퇴법 보완

자료: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2019), "Overview EU (Withdrawal Agreement) Bill,"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54210/WAB_Fact_Sheet_-_OVERVIEW.pdf;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8/16/contents/enacted; 영국정부 누리집, "New Withdrawal Agreement and Political Declar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ew-withdrawal-agreement-and-political-declaration; *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Act 202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1/enacted/data.htm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존슨 총리의 탈퇴협정은 EU·영국 간 협상의 핵심 사안 중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이행기(transition period),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관계를 제외하면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과 유의미한 차의가 없음.**[14]

- 브렉시트일 기준 영국 거주 EU 잔류국민 및 EU 잔류국 거주 영국민에게 기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영국이 2019~20년 EU 예산상의 의무 및 2020년 말 기준 잔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15]
  - △탈퇴일 기준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체류 기간이 5년이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한시적 거주권을 부여하고,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권리를 부여하며, △탈퇴일 이전에 적법하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추가적인 조건 없이 신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탈퇴일 기준 현존하는 가족구성원과 탈퇴 후 출생하거나 입양되는 자녀에게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영국은 △2019~20년 EU 예산에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이 기여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남아있는 예산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EIB(European Investment Bank)에 대해서는 탈퇴일 기준 최고자본금과 같은 금액의 보증을 제공하고, 납입자본금은 2019년 말부터 매년 1회씩 12년간 회수하며, ECB 납입자본금은 탈퇴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 이러한 합의에 따른 영국의 순부담액은 약 30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알려짐.

---

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firstquarterlyestimateuk/julytoseptember2019(검색일: 2020. 1. 18).

14) *Guardian*(2019. 10. 17), "How is Boris Johnson's Brexit deal different from Theresa May'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9/oct/17/how-is-boris-johnson-brexit-deal-different-from-theresa-may(검색일: 2020. 1. 30).

15) 메이 총리가 합의한 탈퇴협정의 주요 내용(EU 잔류국 거주 영국민 및 영국 거주 EU 잔류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권리, 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조동희(2018),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02.

■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관은 실시하지 않고, 단일시장 관련 EU 법령 일부는 이행기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에 일정 기간 적용됨.

-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이 EU(특히 아일랜드)로 운반될 여지가 있는 경우, 우선 영국정부가 EU를 대신해서 해당 상품에 EU의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상품이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소비된 경우 이 관세는 환급됨.
  ○ 'EU로 운반될 여지가 있다'의 구체적인 정의와 관련 절차는 EU와 영국이 추후에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남겨두었음.
- 부가가치세·소비세, 상품, 위생·검역, 농업, 정부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이행기 종료 후에도 4년간 EU 법령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되고, 이후 북아일랜드 의회가 해당 EU 법령의 계속 적용 여부를 결정
  ○ 현재 운영 중인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단일전력시장에도 유사한 절차 적용
- 이 조항은 메이 총리 탈퇴협정 중 최대의 논쟁거리였던 안전장치 조항을 대체하기 위한 것임.

■ [이행기] 탈퇴협정 제132조에 따르면 EU와 영국이 2020년 7월 1일 전에 합의할 경우 이행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EU 탈퇴협정이행법」 제33조는 이행기 연장을 금지하고 있음.

- 현재 이행기는 탈퇴시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는 현행 EU·영국 관계가 상당 부분 지속됨.
  ○ 이행기 중에는 EU법(이행기 중 발효되는 법 포함)과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관할권이 영국에도 계속 적용되나, 영국은 EU 차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 이 기간은 EU·영국 간 미래관계, 즉 이행기 종료 후에 적용될 관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
  ○ 이행기 종료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설정된 것은 현행 EU의 다년도 지출예산안(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14~20년)에 따른 것으로, 이행기를 연장하려면 영국의 분담금 재협상도 불가피할 전망
- 존슨 총리가 이행기 연장 금지를 법제화함에 따라 이행기 연장을 위해서는 영국의 추가 입법이 필요함.

■ [미래관계]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간 통상관계는 관세·수입할당이 없는 자유무역협정을 지향

-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한다는 것은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과 달리 EU·영국 간 통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에 포함되어 있던 '필요한 분야에서 영국이 EU의 제도에 맞춘다'는 내용이 빠지면서 향후 EU·영국 간 제도의 차이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이 시사됨.

3. 브렉시트 개시의 의미와 향후 쟁점

■ [의미] 합의에 따른 브렉시트 및 이행기가 개시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됨.

- 많은 우려를 낳았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됨.
  ○ 2019년 12월 12일 조기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압승한 직후에 이미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급등하여 연중 최고치(1파운드=1.3343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음(그림 3 참고).

그림 3.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 추이



주: 수직선은 영국 조기총선 시점(2019. 12. 12) 표시.
자료: 영란은행 DB(검색일: 2020. 1. 3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앞서 설명한 대로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유지되고,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아래의 설명 참고)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음.
- 한편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영 FTA(2019. 10. 28 국회 비준 완료)가 발효되므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대(對)영국 통상에 급격한 변화가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임.
  ○ 한·영 FTA 발효 시점: 노딜 브렉시트 즉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이행기 종료 시

- 실증분석(김흥종 외 2016)에 따르면 영국이 EU에 잔류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브렉시트가 EU와 영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16]
  ○ 특히 한·영 FTA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16) 김흥종 외(201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향후 쟁점: 이행기 연장 및 협정 수준] 브렉시트 협상 초기에는 EU와 영국이 깊은 시장통합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충분한 협상을 위해 이행기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존슨 총리가 이행기 연장 금지를 법제화함에 따라 일부 분야만 포함하는 기본적인 협정이 우선 체결될 전망

- 협상지침(negotiating directives) 채택, 협상, 합의, 비준 등 협정 체결의 제반 절차를 이행기 내에 실시해야 하므로, 이행기 연장 여부가 협상 가능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전망
  ○ 이행기를 연장하려면 EU와 영국이 2020년 7월 1일 전에 합의해야 함.

- 이행기에 따른 시간제약으로 인해 EU 측은 포괄협정을 추구하던 기존의 입장과 달리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17)]
  ○ EU 측은 관세 철폐, 공정경쟁, 어업, 안보 등의 분야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협정을 우선 체결할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특히 다수의 EU 잔류국이 요구하고 있는 영국 수역 내 어업권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전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 영국 금융기업들은 이행기 종료와 함께 EU의 패스포팅 권한을 잃을 전망인데, 상기한 어업권이 영국이 요구하는 금융시장 개방과 맞교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짐.[18)]
  ○ 반면에 운송 및 항공은 기본적인 협정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

- 존슨 총리의 강경 입장, 미래관계 협상에 대한 EU의 전향적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이행기 연장보다는 현 이행기 내에 낮은 수준의 협정이 우선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19)]
  ○ 이 경우에도 27개 EU 잔류국별로 우선협상 희망 분야가 다르므로 협상 자체는 수월하지 않을 전망

■ [향후 쟁점: 제3국과의 관계] 서비스 분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EU와 영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대(對)미국 자유무역협정 등도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대선(2020년 11월) 전에 EU·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체결될 수 있음을 시사[20)]
  ○ EU와 미국은 2013~16년 동안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사장됨.
  ○ EU 농산물시장 개방이 주요 쟁점이나, EU 측은 디지털세, 항공사 보조금, 자동차 관세 등 대미국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농산물시장 개방 요구에 타협할 수 있음을 시사

- 영국 또한 독자적인 무역협정의 최대 관심사로 대미국 자유무역협정을 꼽고 있는데, EU·미국 간 규제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미국 간 협상과 EU·영국 간 협상이 서로 영향을 미칠 전망[21)] KIEP

17) KBA Europe(2020. 1. 24), 「EU·영국간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의 EU측 주요 입장 요약」, kba-europe.com/xe/index.php?mid=board_LXQd40&document_srl=6205(검색일: 2020. 1. 30).
18) European Commission(2020. 1. 10), "Internal EU27 preparatory discussions on the future relationship: "Personal data protection (adequacy decisions); Cooperation and equivalence in financial services"."
19) KBA Europe(2020. 1. 14), 「EU·영국 무역협정, 기존협정 이상의 포괄적 협정 어려울 듯」, http://kba-europe.com/xe/index.php?mid=board_LXQd40&document_srl=6171(검색일: 2020. 1. 30).
20) KBA Europe(2020. 1. 24), 「EU 및 미국 정상, 양자간 무역협상 조기 타결 가능성 언급」, http://kba-europe.com/xe/board_LXQd40/6206(검색일: 2020. 1. 30).
21) KBA Europe(2020. 1. 7), 「美-英 무역협정, 영국의 규제완화 수준이 관건」, http://kba-europe.com/xe/board_LXQd40/6158(검색일: 2020. 1. 30).